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전망

권 올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이창수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위원 (cslee@kiep.go.kr, Tel; 3460-1065)

주요 내용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2005년 12월 중순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신규참여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초청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협력구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이 의장국을 맡아 3년에 1회 개최될 예정이며, 금번 회의에서는 역내 안전보장 및 외교·안보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주요 의제로 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임.
- EAS는 참여국 확대로 지역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내 협력채널이 다각화되고, 신규참여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한·ASEAN FTA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고, 한·인도 FT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ASEAN은 물론 인도, 호주 등 신규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EAS와 ASEAN+3(APT: ASEAN Plus Three) 협력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 선정 및 향후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PT가 경제·금융 협력 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안보 협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EAS는 물론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역내 협력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특히 안보 및 정치외교기구로서 EAS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1. 개요

- ASEAN+3 정상회의가 확대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2005년 12월 중순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신규회원국으로 초청되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 이번 EAS에서는 지역 및 국제적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과 지역협력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안보, 테러, 조류독감, 재난구호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ASEAN+3 정상회의와는 달리 EAS에서는 안전보장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연대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회원국간 이견으로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이 의장국을 계속 수입하면서 3년에 1회 EAS를 개최키로 하여 ASEAN+3 정상회의와 EAS가 병존하며 당분간 ASEAN 중심의 EAS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ASEAN은 2005년 7월에 개최된 ASEAN 외교장관회의(AMM)에서 EAS 참가국의 기준으로 △ ASEAN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 ASEAN의 대화상대국 지위 △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이라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신규참가국을 호주, 뉴질랜드, 인도로 제한함.
- EAS는 참여국 확대로 지역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내 협력채널이 다각화되고, 신규참여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특히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은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ASEAN+3 정상회의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사업을 실질화함으로써 EAS와의 상호 보완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EAS가 ASEAN+3 정상회의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배경

가. 추진경위

-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보고서는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
 - EAVG은 1998년 ASEAN+3 정상회의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하여 13개국 저명인사 26명으로 설립됨(우리측은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과 이경태 KIEP 원장 참가).
- 2002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 최종보고서는 EASG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26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됨.

표 1. EASG에서 선정한 협력조치 목록(26개)

		주요 사업 및 내용
단기 협력조치	경제적 협력	-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 - 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지위 및 특혜조치 부여 - FDI 확대를 위한 투자유인환경 조성 등 총 7개 사업
	정치적 협력	- 해적, 마약 거래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서의 협력메커니즘 강화 - 동아시아 think tanks 네트워크 구축
	사회, 문화, 교육 협력	- 빈곤감소 프로그램 수립 -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조 등 총 6개 사업
	제도적 협력	- 동아시아 포럼 설립
중·장기 협력조치	경제적 협력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총 3개 사업
	금융협력	- 동아시아 차입 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 등 총 2개 사업
	환경, 에너지 협력	- 에너지 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 수립 및 범ASEAN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 -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환경협력 증진
	사회, 문화, 교육협력	- 시민사회 참여 및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공조에서 NGO와 긴밀한 협력
	제도적 협력	-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3년 12월 일본이 도쿄에서 ASEAN 정상들을 초청하여 일·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조기개최를 위해 노력함.
- 이와 같은 중국의 EAS 조기개최 제안에 대해 1990년대 초반 EAEC를 주창했고, 1997년 ASEAN+3 정상회의를 출범시킨 말레이시아는 의장국으로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주력하였음.
- ASEAN+3 협력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동남아국가간의 내부적인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경우 EAS 조기개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의 부상과 ASEAN의 영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함.
- 2004년 11월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팔라렘푸르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기로 전격 합의함.
- 말레이시아의 설득으로 EAS 조기개최에는 합의하였으나, EAS의 성격과 위상, 개최빈도, 참여국 확대문제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입장차이와 이견이 노출됨.
- 2005년 4월 세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외무장관회담에서 EAS 참여국 기준에 합의하여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를 신규참여국으로 확정함.
- ASEAN측이 합의한 EAS 참여국 기준은 ASEAN의 대화상대국으로서 ASEAN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한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2005년 7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연례 ASEAN 외무장관회담(AMM)에서 이미 조건을 충족시킨 인도와 2005년 7월 TAC에 서명한 뉴질랜드, 2005년 12월 TAC 서명 의사를 밝힌 호주를 신규참여국으로 받아들임.

나. 주요국의 입장

1) ASEAN

- 중국이 제안한 EAS 조기개최에 대응하여 ASEAN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EAS 참여국 확대라는

카드를 내놓고, “확대 ASEAN+3 정상회의” 형식의 EAS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당초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EAS 조기개최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은 EAS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중국 주도의 EAS를 견제하기 위하여 ASEAN은 신규참여국을 확대키로 합의함.
- 이를 통해 ASEAN+1 차원에서 매년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인도와 CER(호주 및 뉴질랜드)을 EAS 참여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ASEAN을 중심축(Hub)로 한 지역협력구도를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실현함.
- 이러한 측면에서 ASEAN+3 협력체제의 중장기사업으로서 제시되었던 EAS 구상이 당초의 의도를 벗어나 ASEAN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확대 정상회의로 변질되었고, ASEAN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역내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EAS 신규참여국 확대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됨.
- 따라서 ASEAN은 EAS의 운영방안으로서 ASEAN이 의장국을 수임하여 3년마다 개최되는 특별정상회의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ASEAN+3 협력체제와는 별도로 정치 및 안보의제를 중심으로 초보적 수준의 대화체제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임.

2) 중국

- 중국은 그동안 친ASEAN 정책을 통해 중·ASEAN FTA 추진과 함께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는 등 ASEAN 국가들과 관계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음.
- 이를 기반으로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의 협조하에 EAS 조기 개최를 공식화하는 데 성공하였음.
-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온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ASEAN의 전략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싱가포르 등 역내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힘으로써 ASEAN 영향력을 활용한 ASEAN+3 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강화라는 전략이 난관에 봉착하게 됨.
- 이와 같이 EAS 조기개최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를 유발하게 된

중국으로서는 참여국 확대로 인해 EAS의 당초 성격이 변하였다는 판단하에 역내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EAS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입장인.

3) 일본

- 일본은 ASEAN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EAS 출범을 지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공동보조하에 EAS 조기개최를 공식화하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EAS 참여국 확대를 주도함.
 - ASEAN+3 협력체제에 기반한 EAS가 조기개최될 경우 중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해온 일본으로서는 인도, 호주는 물론 미국, 러시아, EU 등 역외국의 참여를 주장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주력함.
 -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공조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가들의 대중국 견제심리를 활용하여 EAS 참여국을 확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 현재 일본은 EAS 개최와 관련해서 ASEAN+3 정상회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EAS를 실질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ASEAN+3 정상회의를 중시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편 이번 EAS 개최기간중 열리는 한중일 동북아 정상회담의 경우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현재로선 매년 개최되어 왔던 동북아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됨.

3.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

가. 역내 FTA 추진동향

-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ASEAN FTA가 2005년 7월 발효되는 등 ASEAN을 허브로 역내 개별국간의 FT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ASEAN은 외환위기 이후 역외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동북

아 3국은 물론 인도, CER(호주 및 뉴질랜드)과도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

표 2.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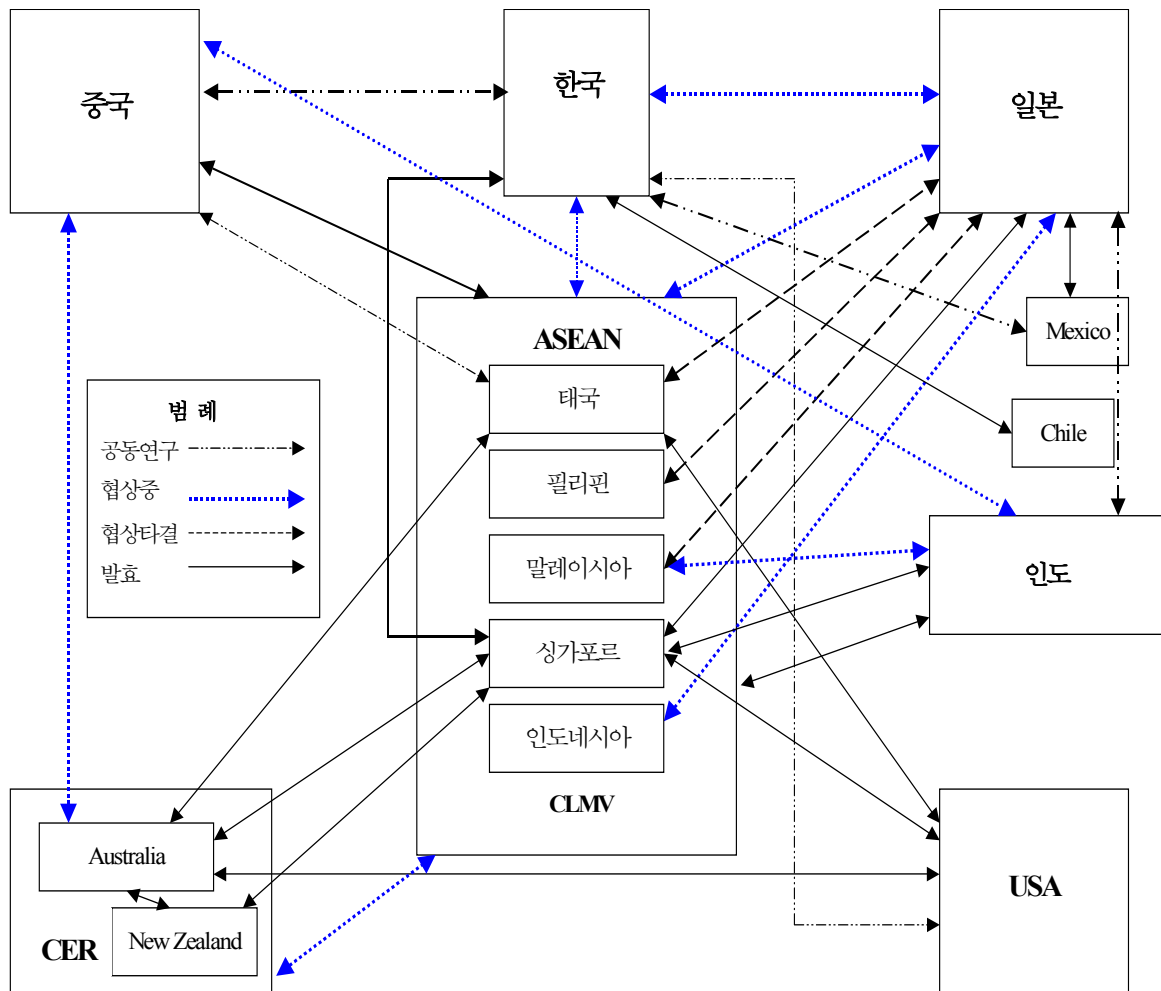
국가	진행 상황
싱가포르·뉴질랜드	2000년 11월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 체결
싱가포르·일본	2002년 1월 FTA 체결
싱가포르·EFTA	2002년 6월 FTA 체결
ASEAN·중국	2002년 11월 정부간 공식적인 합의, 2010년을 목표로 협상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 협정 체결, -선자유화조치 2004년 추진 개시, 2004년 10월 협상 타결 - 2005년 7월 FTA 발효
ASEAN·인도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 2003년 10월 포괄적협력협정 체결, 2004년 11월 FTA 협상 완료
태국·인도	2002년 11월 FTA 협상 개시, 2004년 9월 조기자유화 실시
싱가포르·호주	2003년 2월 FTA 체결, 2003년 7월 발효
싱가포르·미국	2003년 5월 FTA 체결, 2003년 8월 발효
싱가포르·인도	2003년 5월 FTA협상 개시, 2005년 6월 FTA 체결
일본·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 구상 체결, 2005년 8월 2차 협상 -2004년 11월 필리핀과 양자 FTA 협상 타결 -2005년 5월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 협상 타결 -2005년 9월 태국과 양자 FTA 협상 타결 -2005년 7월 FTA 협상 개시, 10월 2차 협상
한국·일본	2003년 10월 공동연구 완료, 협상 중
한국·싱가포르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005년 8월 FTA 체결
한국·ASEAN	2004년 8월 공동연구 종료, 2005년 11월 8차 협상
태국·미국	2004년 6월 FTA 협상 개시
태국·호주	2004년 7월 FTA 추진 서명, 2005년 1월 발효
태국·뉴질랜드	2004년 11월 FTA 협상 타결, 2005년 7월 발효
중국·인도	2005년 3월 공동연구 완료, FTA 협상중
중국·호주	2005년 3월 FTA 공동연구 종료, 8월 FTA 2차 협상 완료,
ASEAN·CER	2005년 2월 FTA 1차 협상
한국·인도	2005년 2월 포괄적 경제연대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
인도·말레이시아	2005년 11월 FTA 협상중
일본·인도	2005년 4월 FTA 공동연구 개시
일본·호주	2005년 9월 FTA 공동연구 개시

주: 2005년 11월 현재 기준.

-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은 ASEAN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01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에서 2010년까지 FTA를 위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고,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7차 ASEAN+3 정상회의 기간 중 ASEAN과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함.

- 중국은 2004년 9월 ASEAN·중국 경제통상장관회담에서 ASEAN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고, 대신 ASEAN 각국에는 예외품목을 대폭 인정해주는 양보를 통해 2004년 10월 FTA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함.
-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ASEAN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 호주와도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마치고, 현재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임(그림 1 참고).

그림 1. 동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와 FTA 추진 현황



자료: 필자 작성

- 일본은 2001년 중국과 ASEAN이 FTA 추진에 합의하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면서 동남아와 포괄적 경제연대를 추진하고 2003년 12월 도쿄에서 일·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SEAN 주요국과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필리핀(2004년 11월), 말레이시아(2005년 5월), 태국(2005년 9월)과도 연이어 FTA 추진에 합의하고, 인도네시아와는 FTA 협상을 추진 중임.
- 한편 ASEAN 전체와의 FTA 협상도 병행하고 있는데, 2005년 8월 2차 협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인도(2005년 4월), 호주(2005년 9월) FTA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개시한 바 있음(표 2 참고).

나. 역내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역내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ASEAN FTA, 한·ASEAN FTA, 일·ASEAN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GTAP 표준모형을 사용한 정태모형과 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모형을 구분하고, 분석시나리오로서 농산물 70% 관세 감축(기타 산업 관세 철폐)을 가정
 - 한·ASEAN, 중·ASEAN, 일·ASEAN FTA의 비교(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모형의 경우)
 - ASEAN과의 FTA로 한·중·일 3국의 GDP(금액 기준)는 각각 1.07%, 0.76% 및 0.39% 증가하여 한·ASEAN FTA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7월 발효된 중·ASEAN FTA로 한국과 일본은 각각 -0.42%, -0.14%의 GDP 감소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ASEAN의 관점에서 한·ASEAN, 중·ASEAN, 일·ASEAN FTA를 비교하면 GDP 증대효과는 각각 0.28%, 2.85%, 1.09%로서 ASEAN으로서는 중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게 됨.
 - 한국 및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ASEAN FTA가 위협적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ASEAN FTA가 한·ASEAN FTA보다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큼.
 -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후생 증가의 개념으로 ASEAN과의 FTA에 따른 GDP 증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24억 달러, 중국은 약 41억 달러, 일본은 약 36억 달러의 후생이 증가함.

- ASEAN과의 FTA에서 한·중·일 3국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0.61%, 0.37%, 0.10%로, 한국의 국민후생수준도 ASEAN과의 FTA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3. 동아시아 FTA: CGE 분석결과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		동아시아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정태모형	자본축적	
거시/ 후생	GDP증가 (물량,%)	한국	0.02	0.49	-0.02	-0.15	-0.01	-0.07	0.40	2.96
		중국	-0.01	-0.01	-0.01	0.47	-0.01	-0.03	-0.01	1.10
		일본	0.00	0.00	0.00	-0.01	0.01	0.07	0.00	0.17
		ASEAN	0.00	0.37	0.15	2.14	0.03	1.22	0.22	3.24
	GDP증가 (금액,%)	한국	0.95	1.07	-0.34	-0.42	-0.20	-0.23	1.37	3.25
		중국	-0.06	-0.03	0.33	0.76	-0.14	-0.15	0.22	1.21
		일본	-0.07	-0.05	-0.17	-0.14	0.37	0.39	1.03	1.06
		ASEAN	0.03	0.28	1.44	2.85	0.25	1.09	1.03	3.17
	후생변동 (백만 달러)	한국	1159	2386	-482	-821	-268	-390	4431	11670
		중국	-243	-152	145	4078	-417	-559	-2645	6560
		일본	-324	-343	-1112	-1154	2046	3573	6205	10092
		ASEAN	111	1615	4137	12775	880	6069	3839	17095
	민간소비 지출(%)	한국	0.30	0.61	-0.12	-0.21	-0.07	-0.10	1.14	3.00
		중국	-0.02	-0.01	0.01	0.37	-0.04	-0.05	-0.24	0.59
		일본	-0.01	-0.01	-0.03	-0.03	0.06	0.10	0.17	0.27
		ASEAN	0.02	0.29	0.75	2.31	0.16	1.10	0.69	3.09
교역	수출액 변화(%)	한국	1.64	1.96	-0.45	-0.62	-0.17	-0.25	5.57	8.74
		중국	-0.11	-0.07	3.38	3.96	-0.19	-0.23	8.54	9.93
		일본	-0.06	-0.09	-0.20	-0.30	1.49	1.80	4.17	4.99
		ASEAN	0.67	0.94	2.30	4.57	1.12	2.47	2.90	6.29
	수입액 변화(%)	한국	2.22	2.23	-0.59	-0.66	-0.22	-0.25	8.44	10.47
		중국	-0.14	-0.08	5.56	6.04	-0.25	-0.25	13.78	14.98
		일본	-0.15	-0.09	-0.50	-0.32	2.10	2.12	5.73	5.83
		ASEAN	0.97	1.12	3.18	5.02	1.76	2.86	4.38	7.16
	교역수지 변화(백 만 달러)	한국	-471	133	102	-106	43	-76	-3044	-364
		중국	-35	-33	-2478	-1592	-54	-181	-5579	-3576
		일본	305	-42	1116	-102	-1506	-124	-3723	-191
		ASEAN	-669	8	-1711	1597	-1658	298	-3586	1244

자료: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CGE 분석결과

■ ASEAN+3가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 추진시 경제적 파급효과(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 모형의 경우)

- 동아시아 FTA는 ASEAN+1 차원의 쌍무적 FTA보다 훨씬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한국 GDP 증가: 1.07% (한·ASEAN FTA) → 3.25%
- 중국 GDP 증가: 0.76% (중·ASEAN FTA) → 1.21%
- 일본 GDP 증가: 0.39% (일·ASEAN FTA) → 1.06%

- ASEAN GDP 증가: 2.85% (중·ASEAN FTA) → 3.17%
 - ASEAN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가 중·ASEAN FTA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역내 교역량 증대효과가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임.

4. 정책적 시사점

- 그동안 역동적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규모 면에서 NAFTA, 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고, ASEAN+3 경제권의 경제규모는 2004년 현재 약 7.8조 달러로서 전 세계 GDP의 19%, 교역규모는 3.6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총교역의 19.5%를 차지하고 있음.
-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될 경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가 증가하여 ASEAN+6의 GDP 비중은 22.4%로 확대되고, 교역규모도 21.5%로 증가함(표 4 참고).
-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양상이 치열해지고, 참여국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확대되면서 지역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역내 국가간 실질적인 협력관계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음.
- 역내 국가간의 FTA 추진동향과 협력구도를 보면 ASEAN을 중심으로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은 물론 역내 국가들이 호주, 인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추진 중인 한·ASEAN FTA 협상, 한·인도 공동연구를 조기에 매듭짓고, 역내 협력관계 정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고 인도와 호주는 ASEAN과 각각 FTA 추진을 합의한 실정인바 향후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개로 경제협의체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역내 경제교류는 보다 다각화될 전망이다.

표 4.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교역비중(2004년)

	GDP		교역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비중(%)
ASEAN	796.8	1.94	1,025.0	5.63
한·중·일	7,006.2	17.05	2,517.6	13.83
ASEAN+3	7,802.9	18.99	3,542.7	19.46
인도·CER	1,412.3	3.44	378.5	2.08
ASEAN+6	9,215.3	22.43	3,921.1	21.54
NAFTA	13,402.5	32.62	3,183.4	17.48
E U	12,845.4	31.26	7,329.2	40.25
세 계	41,086.3	100.00	18,207.0	100.00

자료: GlobalInsight(2005); IMF(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에 대한 관점도 동아시아지역의 상호 의존성과 분업관계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역내 경제권과의 FTA 추진 및 동아시아 FTA 추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타당성 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10~12년경에는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될 것이므로 ASEAN+1 FTA 추진시 원산지규정과 같은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하고 규범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보다 수월해질 것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EAS와 APT 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 선정 및 향후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PT가 경제·금융 협력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안보 협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EAS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으로서는 EAS는 물론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모든 협력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안보 및 정치외교기구로 EA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중·일

협력 또는 EAS보다는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한국은 주도적으로 ASEAN+3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실질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할 것임.